



Received: 2024/08/31
Revised: 2024/09/07
Accepted: 2024/09/28
Published: 2024/09/30

***Corresponding Author:**

Jaeho Kim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PO box number 88-4-1, 1 Jungwon-ro, Jinhae-gu,
Changwon-si, Gyeongnam, 51704, Republic of Korea
E-mail: polijh@navy.ac.kr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국형 해양영역인식 발전 방안

Korean-style Maritime Domain Awareness Development Plan for Promoting Indo-Pacific Strategy of Republic of Korea

오경원¹, 임경한², 이숙연³, 김재호^{4*}

¹호원대학교 항공정비공학과 교수

²해군 대령(진)/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³해병대 중령/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

⁴해군 소령/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Kyungwon Oh¹, Kyung Han Lim², Sookyoon Lee³, Jaeho Kim^{4*}

¹Professor, Dept. of Aircraft MRO Engineering, Howon University

²Captain(Sel.), ROK Navy/Professor, Dept. of Military Strategy,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³LT Colonel, ROK Marine Corps/Professor, Dept. of Security Policy,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⁴LCDR, ROK Navy/Professor,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public of Korea
Naval Academy

1. 서론

2022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역내·외 주요국들이 지정학·지경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태평양(이하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사활적 이익을 가진 한국 정부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는 포괄적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물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에게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안정은 생존과 번영이라는 국가이익에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어온 규범·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복합적인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질서 유지는 한국의 미래 국가이익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통합적인 지역 외교 전략으로서 인태전략을 발전시키고,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의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해 국제 수준의 해양영역인식(MDA)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에게 필요한 함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MDA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MDA의 국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에 관한 정책을 제언한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MDA 구축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후 국제적인 수준에서 MDA에 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In this article, authors focus o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emphasized i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attempt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put it into practice. First, authors draw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eeks to strengthen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implement the security sector of the IP Strategy. Next, authors summarize the status of MDA promotion in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e policies regarding the Korean government's strategic direction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DA. Korea must form a consensus on establishing MDA at the national level and take steps to establish its own governance. Thereafter, the necessary efforts must be focused on establishing governance for MDA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systematically conducting integrated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Keywords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해양정보(Maritime Information),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정보융합센터(Information Fusion Center)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 방안 연구’의 일부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글임을 밝힘.

규범·규칙 기반 질서 강화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글에서는 인태전략에서 강조하는 국제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태전략의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해양영역 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을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함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MDA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MDA의 국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2. 인도-태평양 전략과 MDA

자유로운 해양 활동을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이는 인태전략 추진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9가지의 핵심주제별 인태전략 이행계획에서 잘 드러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 특히 국방 분야에 관한 주요 이슈는 비확산·대테러 협력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분야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등에서 각각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MDA는 해양을 매개로 하거나 해양공간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 안전, 환경, 경제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제 플랫폼으로, 해양안보를 강조하는 한국의 인태전략에는 한국형 MDA 체계가 요구된다. 한국의 해양안보와 해양영역의 개념에 관한 발전은 주로 해군, 해경, 해수부 등에 의해서 이뤄졌다. 해양영역에 대한 이 기관들의 인식은 안보, 안전, 경제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 최근 그 영역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과거 작전구역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제한되었으나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근절을 위한 해양안보 활동에 청해부대가 참가하면서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본격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군의 주요 문서 및 정책에서 해양영역을 안보, 안전, 경제, 환경, 협력 등으로 인식하는

Table 1. The action plan of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1]

Action plan	Key tasks
Strengthening non-proliferation & counter-terrorism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rengthen alliances with the U.S. and Japan Impro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oost regional counter-terrorism efforts Develop space security norms
Expanding security co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hance anti-piracy and maritime safety Improve real-time maritime surveillance Expand joint maritime security exercises Strengthen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IUU fishing response Boost cybersecurity cooperation Expand security ties with NATO Strengthen regional security
Expanding economic security net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pand economic security networks Stabilize critical supply chains Lead free trade discussions, including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Enhancing cooperation in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Join advanced tech networks Strengthen DX cooperation Build open communication networks

경향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글로벌 해양으로의 지리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는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 해양력에 관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MDA 체계 구축을 중요한 국가적 추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잘 알 수 있다. 해양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이러한 인식 변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요국 MDA 발전 및 국제 협력 추진 현황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호주,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 강대국 및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MDA에 관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주요 국가의 MDA 추진이 민관군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다수 국가에서 MDA에 관한 주요국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국가의 MDA 추진 배경과 역량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함의를 정리한다.

3.1 미국

미국은 2001년 9·11 사건 이후 테러를 포함하여 해상에서의 안보 위협을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2000년대 초반 부시 행정부에서 최초로 MDA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했고, 2005년에는 MDA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 2013년 국가 및 해양안보를 위한 국가 MDA 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에는 4번째 개정본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다. 주요 내용에는 MDA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 및 SLOC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MDA에 기반한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 등 중국 연안에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자국의 제반 해양력을 통합하고 동맹 및 안보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해양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미국은 글로벌 수준의 MDA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한다.

MDA에 관한 선도적인 역량을 보유한 미국은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쿼드(QUAD) 등 소규모 다자간 연합을 통해 MDA 확장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MDA(IPMDA)를 추진하면서 인태지역 전반에 걸쳐 해양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한편 미 해군의 해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필리핀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와 주둔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였다. 여기에 더해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핵심 동맹들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에서 전통·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을 함께 고려한 정보공유 체계를 동맹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미국이 추진하는 MDA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일본

섬 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본은 MDA에 관한 준비를 국가안보전략 및 해양전략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본은 해양전략의 적용 범위를 일본 주변에서부터 최근에는 미국이 주로

활동하는 인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공고화하는 방안으로 해상자위대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의 인태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려 한다. 이에 일본은 2017년 아베 총리 시절 미국의 인태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미일동맹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필요성과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전반적인 해양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즉, MDA 체계 구축을 통해 자체 해양력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일본은 법적 정비를 통해 해양전략의 방향성에 맞게 MDA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 해양기본계획을 입법화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안보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보완하면서 MDA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는 총리실 산하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국가 수준의 해양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15년부터 15개 유형, 200여 개의 해양정보를 구축한 해양상황표시 시스템인 ‘우미시루’(Fig. 1 참조)를 가동하고 있는 일본의 2023년 MDA 관련 예산은 약 5조 200억원 수준이며, 사실상 전 세계 해양상황에 대한 정보 구축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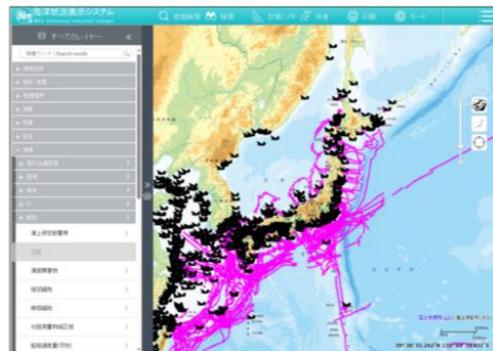


Fig. 1. Launch screen of 'Umishiru(海しる)'[2]

일본이 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MDA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인태지역에서 활발한 해양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SLOC 등 해양에서 제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더해 일본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MDA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자체

적인 역량 강화에 더해 미국을 위시한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QUAD 협력 중 해양 문제에 관한 IPMDA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3.3 인도

MDA를 포함한 인도의 해양안보 정책이 결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년 11월 발생한 뭘바이 테러 사건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해상으로 침투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영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관할해역의 해양안보를 통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최근 인도는 급속히 강화되어 온 중국의 해양활동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인도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95%를 중국 어선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을 활용한 회색지대 작전이 인도양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2014년 취임한 모디 총리는 인도양 지역에서 해양안보를 증진하고, 역내 항만·해운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며, 우호국들과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국가해양 및 해안보안 강화위원회’와 ‘해양안보 검토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해양안보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MDA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도는 해군과 해양경비대 51개 작전센터를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국가 지휘통제, 통신, 정보, 네트워크 센터를 운영하여 연 12만 척 이상의 해운 정보를 수집·분석 후 우호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도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로서 해양의 자유로운 이용과 해양안보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체적인 해양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역내 인접 국가와의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도양 역내의 정보융합센터(IFC-IOR, Information Fusion Centre-Indian Ocean Region)를 통해 인도는 우호국들에게 실시간으로 해양작전 상황도를 제공하고 있다. 광범위한 우호 국가 및 다국적 해양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MDA를 증진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현재 IFC-

IOR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몰디브,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 총 25개국이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가 인도양에서 MDA 역량 강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3.4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지정학적으로 인태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면서도 미 해군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를 운영하고 있어 미국의 인태전략과 연계해서 매우 중요한 국가로 여겨진다. 싱가포르 해협에는 매일 1,000여 척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상 무역의 70%가 이 해협을 지나고 있다. 약탈적 집단들에게는 고가치 표적이 많은 만큼, 싱가포르 해협은 일반적인 해양사고 외에도 범죄집단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는 금융 허브 및 해상 무역에 경제적 번영이 달려있는 만큼, 해양안보는 싱가포르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싱가포르는 2009년 국가 해양안보 TF를 설립하여 2011년 ‘국가해양안보체제’를 출범시켰고, 글로벌 플랫폼인 IFC를 개소했다. 싱가포르가 구축한 해양 거버넌스의 차별적 강점은 다양한 국내 유관기관(경찰·해경·해군) 간의 협력이 제도적으로 성숙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동아시아해양을 중심으로 국제 MDA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하면서 인태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MDA 체계는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3개 층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기구인 ‘국내위기집행그룹(HCEG, Homeland Crisis Executive Group)’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가 해양안보 정책을 총괄한다. 두 번째 층위인 ‘해양위기센터(SMCC, Singapore Maritime Crisis Centre)’는 다양한 해양안보 유관기관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한 관리체제로 해양 감시 및 위협 평가, 작전계획, 수행, 훈련 등을 지휘통제한다. 세 번째 층위는 해양안보 TF이다. 2009년부터 해군의 해양안보사령부로서 기능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해양안보작전을 지휘하고, 필요시 상위 SMCC를 경유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함으로써 해양안보 문제를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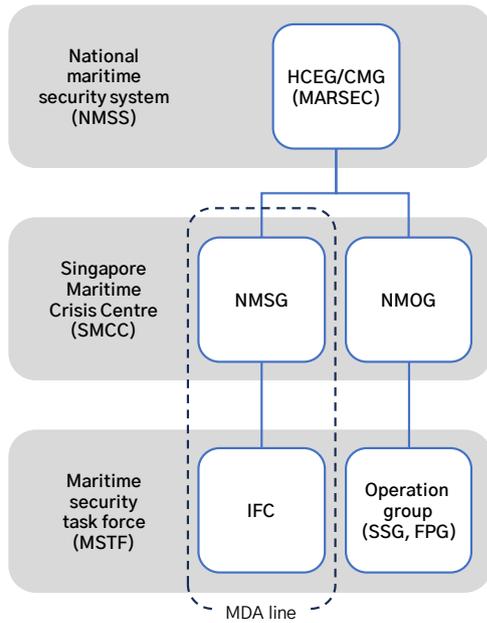


Fig. 2. Singapore’s national maritime security system (NMSS)[4]

싱가포르가 운영하는 MDA 체계에서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기관은 IFC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된 해양정보를 처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범정부적 전략 프레임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43개의 파트너 국가 및 11개 국제 해운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역내 실시간으로 해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포럼 개최와 선박 보안 연습, 다국적 해양안보 훈련 등을 통해 MDA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수준으로 다른 국가의 IFC와 연계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4. 한국형 MDA 추진 방향 및 과제

주요 국가들의 MDA 발전 사례를 보면, 해양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가 수집되는 영역에 따라 정보의 종류와 활용이 달라진다. 해양이라는 영역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크게 해양학(oceanography)에 해당하는 자연정보와 인간들이 만들어 낸 표적정보나 항적정보와 같은 비자연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비자연정보는 수집원에 따라 군사정보, 기관정보, 민간정보로 다시 구분되며, 군사정보 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특별 정보 비밀로 취급되

어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 해양안보와 관련한 해양영역 정보는 Fig. 3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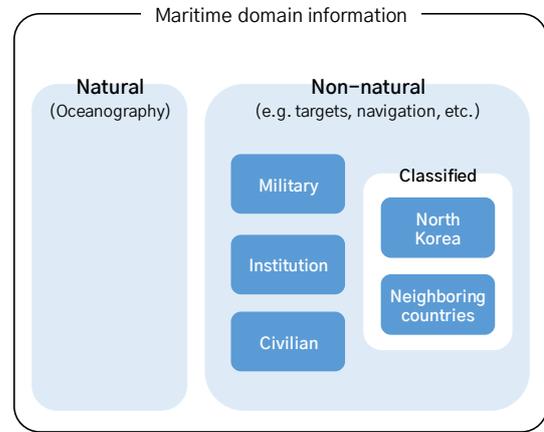


Fig. 3. Types of maritime domain information[4]

국가 수준의 MDA 체계는 해양영역정보에 관한 감시·분석·공유·추적 등 포괄적인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MDA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MDA 발전 전략도 미진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된 해양정보는 통합적으로 분석 및 활용되기보다는 파편화되어 있어 국제 해양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기관 및 민간의 해양정보 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변하는 대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MDA 선진국들은 해양영역에서의 실시간 ‘공통 작전 상황도(common operational picture)’를 작성·분석·공유하는 MDA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경 등 일부 하부기관에서 특정 영역의 MDA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포괄적 영역에서 해양 유관기관 간 역할과 협력을 조정 및 통제하는 국가 관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인태지역에 위치한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한국의 MDA 체계 발전은 10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평가된다. MDA 발전의 평가지표로 삼을 수 있는 국가 IFC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IFC는 2009년에 설치되었고, 인도의 IFC-IOR은 2018년에 설치되었다. 이 국가들이 국가 수준의 MDA 체계를 구상하고 IFC 설치까지 완료하는데 5년 가량

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2022년 발표한 인태전략에서 해양에서 국가 간 공조가 긴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MDA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에도 참여하여 실시간 해양 감시와 정보공유 협력을 촉진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공조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 해양안보, MDA, 해양경제, 해양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2023년 발표된 인태전략 이행계획에서는 한국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광대한 해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MDA 플랫폼 구축, 역내국들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편 포괄안보 및 해양안보 차원에서 대외적으로도 MDA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해양안보 유관기관인 해수부, 해경, 해군의 공통적인 의견은 해경 또는 해군 등 특정 기관이 국가 수준의 MDA를 주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

한다. 해경은 플랫폼 발전을 통한 MDA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군은 정책·전략·조직·체계 발전을 동시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세워서 해수부 차원에서 타 부서와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외교부 등에서 국제협력까지 추진할 수 있는 대응 조직과 체계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MDA 발전을 위한 추동력 확보와 실질적인 MDA 구현을 위해서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MDA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태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안전한 해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한국형 해양정보융합센터(가칭 K-IFC, Fig. 4 참조)를 설립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 싱가포르의 IFC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실시간 MDA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 IFC는 민·관·군 등 매우 광범위한 출처에서 수집되는 해양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범정부 기관으로 설치·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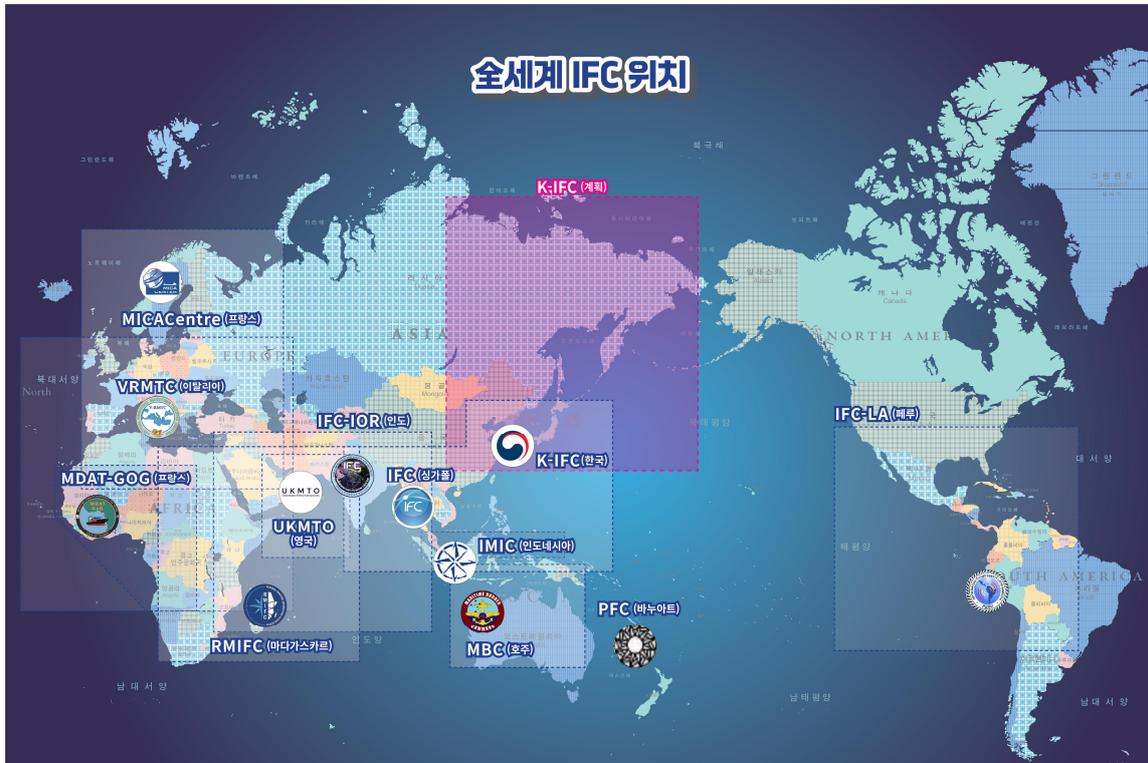


Fig. 4. Global locations of IFCs Including K-IFC(MICA Centre: France, VRMTC: Italia, MDAT-GOG: France, UKMOT: UK, IFC-IOR: India, IFC: Singapore, IMIC: Indonesia, RMIFC: Madagascar, IMIC: Indonesia, MBC: Austrailia, PFC: Vanuatu, IFC-LA: Peru)[4]

국가 차원의 MDA 정의 및 운용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양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MDA 정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DA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해양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융합·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우방국 및 주변국과의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통해 구축된 능력으로 국내·외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파하여 필요한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 안보, 안전, 재난, 치안, 경제, 환경, 자원 관리 등 해양영역과 관련된 제반 분야에 단독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MDA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고찰한 단계적 MDA 발전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여건 조성 및 시험 운영 단계로서 국내적으로 국가 MDA 체계 발전과 국제 MDA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국가 차원의 MDA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와 해양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 MDA 발전 전략(가칭)”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 상설조직의 설치가 요구될 것이다. 이후에는 설치된 상설조직을 중심으로 국제 MDA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국내·외 기관과의 접촉을 다차원에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제2단계는 한반도 주변 및 서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현재 선진적으로 MDA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MDA 협력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신속하게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나아가 QUAD가 주도하는 IPMDA (Indo-Pacific Partnership for Maritime Domain Awareness)와 같이 인태지역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MDA 체계를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좀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단계는 글로벌 안보와 국가안보 차원의 MDA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이나 AUKUS, Five Eyes에서 추진하는 정보공유 협력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전 세계 해양을 단독으로 커버하기에는 비용과 인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상황이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기밀 체계를 포함한 MDA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

가 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한반도 주변해역 및 서태평양, 동중국해 해양에서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 온 정보 인프라와 실시간 정보공유 역량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국 또한 미국 등이 보유한 해양 기밀 정보를 일부 제공받을 수 있다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 추적, 분석, 예측을 통해 한국의 안보 이익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에게 MDA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인태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MDA 체계 구축과 연계한 국제적인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을 고민해 왔고,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MDA 구축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자체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후 국제적인 수준에서 MDA에 관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관련기관의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MDA 발전 정책은 정부 내 어느 한 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2024년 5월 출범한 국가우주위원회의 예를 참고하여 국가 MDA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해양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 MDA에 관한 기획 문서를 발간하고,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국방부·외교부·해수부 등에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외교 및 경제 분야로 파급되는 단계별 발전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MDA 체계의 운영은, MDA의 주된 목표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해양영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관한 직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이 전반적인 체계 운영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컨대 각 기관에서 수집된 해양영역정보를 국가안보실에 설치된 K-IFC에서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외교부 등이 국제 정보공유 협력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해양을 통한 국가이익 수호를 경제 및 안보의 필수요소

로 고려해야 하는 국가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해양 강국들이 보여주는 MDA 관련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함의를 확인함으로써 단기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MDA 운용개념을 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해양감시 체계를 확보하고, 이상 징후를 식별 및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인접한 국가들과 상호 정보 소통을 통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해양 종합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하면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국이 인태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인태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해양활동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MDA에 관한 핵심적인 리더십을 통해 해양에서의 정보 활용과 분석,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안 및 사이버 대응,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정책 및 방산능력 등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한 다양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2023), Progress Report of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 [2]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24), “일본의 해양영역인식(MDA) 구상(번역본)”, <https://kims.or.kr/publication/issue-focus/if-2409> (검색일: 2024. 8. 16.)
- [3] 오경원(2024), “국가차원의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발전 방향,” 『2024 국방우주세미나 자료집』.
- [4] 오경원·임경한·이숙연·김재호(2024),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분야 이행을 위한 국제 해양영역인식 협력 방안 연구』.
- [5] 전성환(2024), “인태지역 해양안보 정세를 고려한 국제 협력 강화방안,” 『2024 해양안보 핵심기술 심포지엄 자료집』.
- [6] 대한민국정부(2022),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 [7] 임경한(2024), “미중 해군력 경쟁 시대 동아시아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의. 『Journal of KNST』 Vol. 7, No. 1, pp. 72-77.